

입법정보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05

2026



목차

01

법령 제정·개정 동향

-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01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02
-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03

02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04
- 2.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05
- 3.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06

03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 1. 공익사업 시행 시 비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지원 가능 여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07
- 2. 공공시설·행정재산 사용료를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 천안시) 08
- 3. 고향사랑기금 설치 시 조례에 별도의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서구) 09

04

국외 입법례

-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 10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28. | 법률 제20977호, 2025. 5. 27. | 제정

제정이유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와 관련 정보의 취득·활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 등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계획, 재무상황, 자금조달계획 및 추진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할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보고, 자료 제출 및 통계 생산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동의 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 법률 제21110호, 2025. 11. 11. | 일부개정

개정이유

-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자 간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정보를 공개하며,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 및 치료를 지원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시 환자의 이송·전원·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시설·인력·장비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관련 정보를 중앙응급의료 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신속한 통신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담당부서 지정, 신고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 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 일부개정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유산수리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감리 및 관련 업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손해배상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가유산수리기능자도 자격 취득 후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함.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행 2026. 5. 13.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877호, 2026. 5. 13. | 제정

제정이유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복지·교육·보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차별 없이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및 아동 확인증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청장이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여 출생 등록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부모의 신청, 제3자의 신고 또는 구청장의 직권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확인서와 아동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복지·교육·보건 서비스 연계, 행정 지원 및 공적 보호체계 편입을 지원하고, 등록되지 않은 이주 아동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정기적인 사후관리, 비밀유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관계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도별 현황

- 경기도 수원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등



2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시행 2026. 5. 7. | 울산광역시조례 제3280호, 2026. 5. 7. | 제정

제정이유

- 노선버스 우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노선버스 및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노선버스에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 연구기관, 운수업체 등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평가하도록 함.
-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도별 현황

- 경기도



3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5. 20. | 부산광역시조례 제7948호, 2026. 5. 20. | 제정

제정이유

- 최근 무인점포 증가와 상주 인력이 없는 운영 특성으로 인해 절도, 기물파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무인점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무인점포 및 안전관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함.
- 무인점포 운영 실태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함.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 보급, 소방시설 점검, 화재·범죄 예방 교육·홍보 등 안전관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 고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경보시스템,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시스템 등 방법·안전설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구·군 및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도별 현황 • 대구광역시



1

공익사업 시행 시 비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지원 가능 여부

[의견26-012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질의요지

-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임의 변경하여 장기간 거주해온 자에게 주거이전비 성격의 지원 사업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점포별 지원 사업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할 수 있는지?

의견

-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을 보호·지원하는 것은 주민 복지증진 및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비주거용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변경한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와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하는 것은 상위법령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음.
- 반면, 무허가건축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법령상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정 손실보상과 구분되는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점포 이전 지원 사업은 개별 법률상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경우 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 지원 대상,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공공시설·행정재산 사용료를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26-0099] 충청남도 천안시

질의요지

- 공공시설이나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때, 조례에 산정 기준·상한선·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금액은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
- 다만, 사용료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산정 기준, 상한·하한 또는 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 구체적인 세부 금액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또한 규칙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운영규정으로 사용료를 정하도록 할 수 있음. 다만, 조례에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료 전부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3

고향사랑기금 설치 시 조례에 별도의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의견26-01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질의요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에 별도로 기금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의견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기금으로, 기금의 설치 근거가 이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제11조제5항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별도의 기금 설치 근거를 둘 필요는 없으며,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함.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

국회도서관 | 최신외국입법정보 | 2026-9호 | 2026. 5. 12.

- 독일은 2026년 「민간투자 촉진 및 금융입지 강화 법률」을 제정하여 상장제도, 공시 체계, 투자세제, 금융감독 및 자금세탁방지 제도 등 자본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를 통해 성장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자본의 생산적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 유럽 단일 정보접근 거점(ESAP)을 도입하여 재무정보, 지속가능성 정보 및 증권 발행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중소기업 성장시장 상장 절차를 간소화함. 또한 유통주식 비율 완화, 최소 액면가 인하, 복수의결권 구조 허용 등을 통해 성장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 투자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재생에너지, 인프라, 전기차 충전시설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감독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도모함. 이를 통해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금융시장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금융정보 통합 제공,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및 투자 활성화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입법례임.

입법정보란?

법령 제정·개정 동향,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령 입법예고 사항 확인

- 법제처 | <https://bit.ly/4tPEaBq>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bit.ly/46kTUCr>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033-249-5707